

다산포럼

무엇보다 이름을 바로잡아야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혁명이란 한 문짝 차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의 저자 갈브레이스 교수가 했던 말로 기억한다. 왜 그런가? 이미 새로운 생각이나 질서가 받아들여진 세상에서 옛것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낡은 체제는 폐기를 확인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 정치에서 일어난 일은 혁명적이긴 하나 혁명이라 부르기엔 좀 부족하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지만 어디까지나 헌법 절차에 의해 본래 있어야 했던 헌법 질서를 온전하게 한 것이지,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과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새것이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

나기도 하지만, 새것이 등장하지 못해 그저 낡은 체제가 동요하기를 거듭하기도 한다. 과거의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도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지 못한 채 또 다른 한계나 난관에 빠졌던 경험이 우리 역사에 몇 차례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도 그런 역사의 후퇴를 상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탄핵과 함께 낡은 정치 질서가 가고,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올지는 아직 확실할 수 없다. 그러나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질서 있게 도모한다면 그 또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언론이 제 구실을 하고, 국민이 광장에서 질서 있게 의사 표현을 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하여, 제 구실을 하지 못한 대통령을 파면했듯이 말이다.

공자는 정치정야(政者正也), 곧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라 했다. 또한 위나라에서 정치를 맡게 되면 무엇보다 하겠느냐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必也正名)고 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름이 어지러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다. 사슴과 말의 이

름을 어지럽혔던 진나라는 조정의 권력이 농단되고 천하가 혼란에 빠졌다. 그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떠올리게 했던 정권의 운명도 우리는 보았다.

지난 4년 동안의 이슈들을 보자. 국정원 대선 개입,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종,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건 때 보여 준 정부의 태도, 피해자와 국민 여론을 외면한 위안부 합의, 거센 국민적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계자의 이해와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 없이 돌연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 비선 국정 개입 등. 숨 거쁘게 이슈로 이슈를 덮고 넘어갔던 이런 것들은 이름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 보호 임무를 받기하면서 안보를 말하고, 사사로운 집단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가기관이라 말할 수 없다. 동맹이란 이름이 종속이나 맹종일 수 없다. 국정원 댓글 공작은 이름과 말을 어지럽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민주, 법치, 경제민주화, 안보, 공권력 등등의 이름이 바로잡히면 나라가 나라다워질 것이다.

정치권에선 저마다 보수와 진보를 말하지만, 명백한 헌법 가치를 무시한다면 사이버 보수와 사이버 진보일 뿐이다. ‘좌측 갑박이예 우회전’이란, 입으로는 진보

를 말하지만 의지가 실력이 없어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사이버 이름 사이에 빠져 있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정치인이 표를 쫓아 대중 영합에 급급하다 보면, 어느새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종북이란 이름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적폐세력이란 말도 아전인수 식으로 남용되던 언어적 폭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 어찌 정치가들만의 일이겠는가? 시민들은 분열적 언어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한 분석적인 이름도 경계해야 한다. 민영화, 규제 철폐, 테러리즘과의 전쟁, 신자유주의 등의 이름은 곧잘 다른 동기를 은폐하곤 했다. 이름에 맞게 제 구실을 하는 것도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언론이 언론답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고, 기업이 기업답다면 나라는 나라다워질 것이다.

“이게 나라냐?”는 질문은 여러 이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엔 비약이 없었지만 중요한 계기가 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크게 바뀔까마는, 많은 사람이 바뀌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변화는 온다. 막연한 요행을 바라기보다 기본에 충실할 때다. 그 기본이 바로 이름을 바로잡는 일이 아닐까.

교단에서



김 진 구  
우산중학교 교감

짜장면집도 다국적이다

시 대통령은 국제평화라는 명분으로 걸프전을 선포하고 이라크를 공격하여 자국의 철저한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은 모두 도덕적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한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다른 학생의 면접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였는데 외교관의 역할과 국제정치에 대한 막힘없는 대답으로 1시간가량 되었으며, 면접에 참여한 학과 교수 6명 전원이 면접을 주어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숨 막히는 면접시험에서 단순 지식만 가지고는 적절한 사례를 들어가며 소신 있는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폭넓은 독서와 진로에 대한 열정, 종합 사고력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지식 가득한 외교관보다는 지혜로운 외교관이 필요한 시대여서 새삼스레 이 사례가 떠오른 것이다.

학교 후문 근처에 허름한 짜장면집이 있다. 3000원에 맛도 괜찮으니 요새 어려운 말로 가성비가 높은 집이다. 몇 가닥 먹다가 고개를 드니 벽에 붙은 원산지 표기가 보이는데 그야말로 다국적이다. 소(호주), 돼지(독일), 닭(브라질), 오징어(칠레), 낙지(인도네시아), 주꾸미(베트남), 배추(중국), 고춧가루(중국)다. 웬만해선 음식점에 가면 그래도 김치는 국산이 버티고 있는데 딱 쌀만 빼놓고는 모두가 오대양을 건너온 재료들이다. 국내산이

아니라고 먹다가 나올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대로 써놓아 오히려 착한 식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든 음식점이든 이제 우리 식탁은 ‘메이드 인 월드’(Made in World)다.

학교 급식이나 단체 학생을 인솔할 때 간혹 비빔밥이 나오는데 참기름이 빨간 케첩 통에 담겨 있다. 병아리 눈물같이 아껴 넣던 참기름을 자동차 엔진오일 넣듯 들어붓는다. 우스갯소리로 중국 덕분에 마음 놓고 참기름끼나 먹게 된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중국산이다. 국산 가격은 높고 중국산은 값싼 비치떡이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중국산이냐’고 묻고 확인한다.

역사 이래 우리나라가 중국 낮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근대화 이후 수십 년간 중국제품 무시하고, 자부심도 가졌었는데 이제 막이 내리는 것 같다.

사드 배치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찬반 여부를 떠나 중국이 보이는 반응은 치졸하다. 우리 국적의 가가게 문을 닫고, 일시에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가 금지되었다. 수천 명의 크루즈 여행객 중 단 한 명도 내리지 않는 현실을 두고도 중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애국심의 발로라고 한다.

면세점이나 관광업계, 제주도도 명동의 상가 피해는 보도된 일이고, 학교 현장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계획된 학생 교류 사업이 중국의 일방적인 방한 불허로 불투명하다. 중국으로 가던 수학여행도 취소하고 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 1위는 한국인으로 450만 명(17%)이다. 2위 일본 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은 중국이 800만 명(46%)이고, 두 번째 일본이 230만 명이다. 인구 비례나 규모도 본다면 중국 관광업계에 우리나라도 큰손이다. 중국에서도 상당한 역풍이 불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가 설치한 국내 ‘공자아카데미’는 ‘놀자 아카데미’로 문 닫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련꽃보다 더 붉은 자본의 시대에 돈을 좇는 건드리는 것은 또다른 현대전이다. 나라가 힘이 없거나 외교력이 없으면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한양에서 들리는 소식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犬草食音)만 들린다.

기 고

전화 한 통과 일자리



김 덕 윤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보통기술(ICT)과 결합한 새로운 산업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며 엄청난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파도를 먼저 올라타야 한다고 한다. 정재계, 학계 할 것 없이 입 모아 한목소리다. 우리 사회 익숙한 화법이지만 초기에 뒤처지면 못 따라잡는다는 식의 압박도 따라붙는다. 장삼이사 의 문외한이지만 의문이 남는다. 과연 이 파도는 우리 모두 올라탈 수 있는 파도인가.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는 오늘날 혁명이라고까지 말해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과연 모두에게 좋은 것인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이전 주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1.3% 증가에 그쳤다 한다. 거칠게 말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생산성 증가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생산성 역설’이란.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는 증가 기관의 발병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

를 많이 만들 낸 것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은 그 핵심전망이 ‘고용의 대폭 축소’라고 경계해 말하는 이도 있다 한다. 변화의 속성이겠지만 다가 올, 혹은 이미 와 있는 변화가 모두가 반기는 변화는 아닌데 얘기를 한다.

환갑을 넘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산다고 할 때 자녀가 말리던 때가 있었다. 왜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자녀의 효심어린(?) 마음이었다. 이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일상 풍경이 되었다.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과실을 풍성히 거두되, 그 과실을 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나눔이고 그것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함께라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첨단 기술이 실용화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해도 온라인, 기계 장비로 대체된 일자리는 그 전에 비해 턱 없이 줄어든 일자리이다. 그것을 기업은

비용절감이라 부르지만 바티칸의 그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죄라고 본다.

‘해고나 공장 폐쇄, 구조조정이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사람은 중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사람과 만나는 맛이 있어야 한다. 통장 들고 찾아온 어르신들 만나 건강을 묻는 은행원, 영동하지만 재지 있는 발달장애 판매원,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하지장애 톨게이트 요금정산원들은 당연하지만 숫자로만 환산되는 비용이 아니다.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쏟아지는 미래전망에 한 장면을 더 넣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과 젊은 청각장애인이 마주서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요 티티’, ‘그렇게 ~’ 하며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나누는 미래이다. 그 어르신은 앞으로 나의 모습이고 그 청년은 당신의 자녀일 수 있다.

社 說

‘5·9 장미 대선’ 불법 없는 깨끗한 선거로

어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촛불 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짧은 데다 유례 없는 다자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 등 불법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높다. ‘아니면 말고’ 이고 상대방이 하면 네거티브라는 아전인수식 해석도 판을 친다.

하지만 짧은 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미혹의 의혹을 퍼뜨리는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에 대한 비방

과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당당하게 제시해 선택을 받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홍순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5월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겠다”며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단체운동·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만큼은 공명선거를 이룸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쁨을 마련했으면 한다. 선관위 또한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고발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 역시 누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사드 여파 중국관광객 급감 대책 없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광주 지역을 찾는 중국 관광객(유커)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상품을 팔지 말도록’ 지역 여행사에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유통·관광업계가 우려한 ‘유커 쇼크’가 지역의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방문한 유커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6%(33만 명)나 감소했다. 유 들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백화점 방문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롯데백화점의 경우 단 한 달에 두 번쯤(150~200명 단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맞았다. 이들 중국 관광객들은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양도를 거쳐 광주에 도착해 정음성 생각을 둘러싼 뒤 백화점 쇼핑을 하는 코스를 즐겨 이용해 왔다.

문제는 사드 역풍과 히딩크 호철 폐업으로 ‘중국 관광객 루트’마저 사라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중국 관광객들이 찾지 않아 이런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히딩크 호철이 폐업한 데에도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음성 생가 터로 알려진 이 호철에는 한때 한 달 평균 중국인 3000여 명이 숙박했고 인근 구도심 일대의 음식점들도 호황을 누렸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관광·유통업계는 사라진 중국 관광객들을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를 체질 개선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시장을 다변화해 품격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대신 중동과 동남아시아 쪽으로 눈길을 옮기는 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이맘때 꼭 찾아가고 싶은 봄 풍경이 있다. 산벚꽃 핀 화순 운주사와 세랑제(세랑 저수지)다. 운주사 산벚꽃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불상들과 잘 어울린다. 또 만개한 산벚꽃과 신록이 잔잔한 수면에 반영되는 세랑제는 말 그대로 선경(仙巖)이다. 올해 봄은 바쁘다는 핑계로 두 곳 다 가지 못했다. 아마도 어제 봄비에 꽃잎이 모두 졌을 것만 같다.

산벚나무는 일부러 심은 도로변의 벚나무와 달리 아무렇지 않게 산자락 이곳저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한다. 또한 우리

벚꽃 단상

나무 이름을 한국 원산 벚나무로 고쳐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정도로 물러 피는 반면 산벚꽃은 산에서 ‘홀로’ 피는 경우가 많다. 봄철 산행을 하며 바빠 걷다가 예기치 않게 산벚꽃과 마주치기도 한다. 이파리가 울퉁기 전 하얀 꽃을 나무 가득 피운 산벚꽃 자체에 절로 발걸음이 멈춰진다. 벚꽃이 화장한 얼굴이라면 산벚꽃은 맨얼굴 같아서 자연미가 느껴진다.

우리는 벚꽃을 보며 ‘일본 꽃’이라 배척하면서도 화려함에 끌리는 이중성을 보인다. 미국 동양미술사학자 존 카터 코벨이 쓴 ‘부여 기마족과 왜(倭)’를 읽다 보면 벚꽃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

실이 눈에 띈다. 미국 워싱턴 D.C 제퍼슨 기념관 연못에 심어진 벚나무가 일본 벚나무로 알려져 있으나 제주도에 서 건너온 한국 벚나무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912년 일본의 도쿄시장이 워싱턴에 벚나무 선물을 보냈으나 벌레 때문에 다 죽어 버렸다. 그래서 수년 후에 일본은 제주도에서 캐온 벚나무를 다시 선물했다고 한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듯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벚나무 이름을 한국 원산 벚나무로 고쳐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국립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라산 전역이 왕벚나무 자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라산 173개 지역에 194그루의 왕벚나무가 자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농순이처럼 떨어지는 벚꽃잎과 함께 봄날이 간다. “꽃장미이란 말/ 가슴이 벅잡니다/ 꽃음이 하나하나가/ 세상이 우주라지요/ 아, 아, 아/ 그만 가슴이 열려/ 나도 한 송이 꽃으로 팽/ 터지고 싶습니다.”(나태주, ‘화입’ 전문)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정지서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